

‘평화헌법’의 운명이 걸린 참의원 선거

윤희일_경향신문 도쿄특파원

2016년 7월 1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 등 이른바 ‘개헌 세력’은 이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개헌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베 정권 등에 의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유지해온 전후(戰後) 일본의 국가 체제는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 ‘개헌’은 아베의 꿈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를 폐기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든다는 꿈을 오래전부터 꾀왔다.

이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용의자 출신으로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전 총리가 꾀온 꿈이기도 하다. 수많은 일본의 우익인사들 역시 오랜 세월 같은 꿈을 꾀왔다.

아베 총리 등 다수의 개헌파들은 현행 헌법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전쟁에서 진

나라라는 약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 바로 지금의 헌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개헌을 이룸으로써 이른바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이른바 ‘전후체제(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 체제)’에서 탈피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헌의 최종 목표점은 헌법 9조를 바꾸는 것이다. 헌법 9조의 내용은 ‘전쟁 포기’가 그 핵심이다. 여기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9조 2항에는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의 내용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진다.

일본은 그러나 이런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상당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자위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개헌추진파들도 인정한다. 그들은 이 위헌소지를 개헌추진의 이유로 내세우기도 아베 총리도 “헌법학자의 70%가 위헌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뒤도 되느냐”면서 위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우긴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을 폐기하는 것이지만, 당장 헌법 9조의 개정엔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헌법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확보되면 우선 ‘긴급사태 조항’ 등을 헌법에 추가하는 식의 ‘맛보기 개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긴급사태조항 추가 주장은 지난 4월 구마

모토(熊本)지진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추가하는 개헌에 성공하고 나면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를 바꾸는 '본격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바라는 개헌안의 모습은 자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2년 내놓은 개헌안초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민당의 '일본국헌법개정초안'을 보면 군대를堂堂하게 만들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 9조는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는 현행헌법 9조의 내용은 삭제됐다.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요건인 중의원 및 참의원 소속 의원 3분의 2 확보가 필요하다.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 서는 자민·공명 등 연립정권을 통해 이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과 그 이외의 개헌 추진 세력을 모아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여당만으로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과 3분의 2를 구성해 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적극적인 정당까지 끌어모아 개헌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 준비는 끝났다

주요 7개국(G7)정상회의(5월 26·27일)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방문(5월 27일) 등 2개의 대형 이벤트는 아베 총리가 개헌으로 가는 길에 깔아준 ‘레드 카펫’이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개최한 두 이벤트를 통해 자신이 ‘세계 지도자 중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미국이 히로시마원폭에 대해 사실상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가 사실상 기획·연출한 두 이벤트는 지지율로 아베 총리에게 화답했다. 교도통신이 5월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5.3%로 전달 조사 때보다 무려 7% 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같은 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56%로 이전 조사 때에 비해 3% 포인트 올랐다. 이는 아베 내각이 개각을 실시했던 2014년 9월의 60%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월 조사 때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한 49%로 나타났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도 함께 올랐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44.4%로 이전 조사 때에 비해 7.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자민당에 표를 던지겠다는 답변은 40.3%로 7.2%포인트 증가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소비세율 인상 문제였다. 2014년 말, 아베 총리는 8%인 소비세율을 2017년 4월 10%로 올리겠다고 뜻을 밝혔다. 당시 동일본대지진 규모의 재해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이 닥치지 않는 한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당시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가 그럭저럭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켜나가면서 증세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본 경제는 확연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증세를 예정대로 단행하는 경우 경기부양이 어려워지고, 국

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참의원 선거에서 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려한 아베 총리는 6월 초,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야당들은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없게 됐다면서 아베 정권을 공격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인상 연기의 구실을 밖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구체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내세우면서 지금은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 구실을 찾아왔다.

■ 결집하는 ‘반 아베 세력’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이어 안보법 제정까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 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은 나약하다. 아베 정권은 지지율이 50%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야당 중에서 지지율이 10%를 넘는 정당을 찾기가 어렵다. 야당은 참의원 선거구 가운데 32개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이루는 등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헌 저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주요 4개 야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진·공산·사민·생활 등 4개 야당 대표는 지난해 안보법 반대를 주도한 대학생 단체 ‘실즈(SEALDs)’, ‘학생들의 모임’, ‘엄마들의 모임’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합’의 대표단과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만나 안보법 폐지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난해 아베 정권이 주도해

만든 안보법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노리는 것은 아베 정권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다. 시민연합은 야 4당 측에 전달한 ‘정책요망서’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합이 이날 강조한 ‘개헌 저지선 확보’는 여권을 포함한 개헌세력이 중·참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는 상황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소비세 증세연기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과 헌법 개정은 일본을 다시 전쟁하는 나라로 가게 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호소할 작정이다.

G7정상회의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방문 직전에 발생한 오키나와 미군 군무원의 일본 여성 살해 사건은 미·일협력과 주일미군기지의 이전에 힘을 쏟아온 아베 정권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G7정상회의 개최 전날(25일) 미·일 정상회담을 급히 열어 이번 사건을 집중 논의한 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재발 방지’ 발언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사건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6월 4일 오키나와의 미군 소속 현역 군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일본인 2명을 다치게 하면서 오키나와 미군과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야권은 현지 주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일협력을 강화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해온 아베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겠다’는 아베 정권과, ‘헌법 개정만은 막아내겠다’는 반아베 세력 사이의 ‘대결전’에 일본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日本空間